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미국과 숨 막히는 무역 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한국은 관세율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본 및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자동차 15%,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미투자 3천5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1천억달러,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완전 개방 등의 요구를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당장 한국경제는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상호 교역 상품의 98%가 무관세인 상황에서 이제 관세 15% 부과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경쟁력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기업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공장에서 수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외 공장은 값싼 인건비와 물류 및 투자비용, 현지 국가의 투자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구축 등의 유리한 조건들이 작용했다. 이번 협상으로 현대기아차는 관세가 0%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수익성 감소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미국 시장에서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부품 관세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본격

트럼프 관세와 기아차 멕시코 공장

적인 관세가 시행되면 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과 소비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량의 40% 수준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미국산 포드와 GM, 일본의 혼다와 도요타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지금의 미국 내 3개 공장의 연간 100만 대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부품을 현지화하는 작업이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일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 상황에서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 페스케리아 시 근교의 기아 멕시코(KMX) 공장을 탐방하는 행운을 가졌다. KMX 단지 내의 공장은 2014년 8월 법인 설립 더불어 2016년 6월 양산체제를 갖췄으며 임직원 2천500명가량이 근무하고 올해 28만대를 넘는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공장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1시간 이내의 광활한 대지에 있으며 프레스 공장의 균압실린더 설치, 차체 공장의 다차종 유연 생산시스템과 100% 로봇 용접, 의장 공장의 모듈 브릿지 직공급(FRT/RR 서스펜션 및 범퍼)과 윈드 물류시스템(트림, 화이날, 도어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실 새 없이 양산되는 승용차들과 근무 중인 주재원들의 모습에서 뿌듯한 감정을 느껴졌고 멕시코 근로자들은 일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몬테레이는 기아 멕시코 공장과 근접한 대도시로 멕시코 동북부 미국 텍사스 주에 접한 멕시코 제3의 도시이며 누에보 레온(Nuevo Leon) 주의 주도로 자동차, 항공우주, 가전제품,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달로 산업과 비즈니스 중심지로 북미 시장의 전략적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위치와 핵심지로 한국기업은 물론 Cemex(시

멘트), FEMSA(코카콜라 라틴아메리카), Alfa(석유화학, 통신, 자동차), Axtel(통신)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몬테레이에 몰려들어 멕시코 제조업 수출의 11.5%, GDP도 8%를 차지하여 1인당 GDP가 1.7배로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글로벌 자동차사는 값싼 노동력과 물류비용, 그리고 완성차의 북미산 부품 75%이상, 엔진과 변속기의 핵심부품 비중이 70%이상이면 미국 수출시 무관세혜택으로 GM(3개 공장), Nissan(2개 공장), VW(2개 공장), KIA(1개 공장) 등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 시장을 상대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으며 기아차도 60%를 수출하고 있다. 아직 멕시코는 25% 관세를 90일 연장하고 자동차 25%,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의 50% 관세를 지불한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은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면 관세 예외를 적용받게 되지만 USMCA 재협상 가능성으로 자동차, 가전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현지 미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부품의 현지화를 꾀할 것이다.

이런 관세 대응에 따른 한국기업의 움직임은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과 관련하여 생산라인의 축소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생산의 비중을 감소시켜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제 광주·전남은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산에너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의 기술로 미래 산업생태계를 이룰 신산업과 '트럼프 라운드'의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응해야 한다.

섬, 그리고 해양경찰

일구어 왔다. 국가 주도의 연륙교(連陸橋) 사업으로 사·남해권의 많은 섬 들이 육지와 속속 연결되고 있지만 대다수 뱃길을 통하고 서야 육지와 연결된다.

섬은 주민들 생활의 터전임과 동시에 국가의 경계이자 최전선으로서도 함께 존재한다. 대륙으로의 육로가 막힌 한반도의 특성상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섬이다. 독도, 격렬비열도와 백령도, 마라도와 가거도 등 섬은 우리 해양영토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거점이다.

해양경찰은 단절된 섬과 육지를 잇는 가교(假橋) 역할을 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토의 끝단을 수호하기 위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목포해양경찰서 관내에는 1천167개의 유·무인도서가 분포해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기에 해양경찰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한다.

도서지역은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된

상황에서 고립되는 일이 잦다. 목포해경은 높은 파도를 뚫고 연 평균 350여 명의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해 누구나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지키고 있다.

매해 8월8일은 '섬의 날'이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와 같이 섬의 중요성은 날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의 섬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필요한 때다. 더불어 이러한 염원이 보태진다면 점점 공도화(空島化) 되어 가고 있는 섬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그곳이 고독하고 위태로운 공간이 아닌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남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 필자를 비롯한 해양경찰은 섬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장칼럼



채 수 준
목포해양경찰서장

“엄마가 섬 그늘에 굴 파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자장가「섬집아가」는 고요한 바닷가 마을의 정경을 노래하지만, 그 고요 속에 어머니의 수고와 섬이라는 공간이 가진 고립감이 숨어 있다. 잠잠 있는 자장가 선율처럼 섬은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때로는 고독하고 위태롭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삶 또한 녹록치 않다.

낙후된 의료시설, 소방서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의 부재, 기상악화 시 육지와 단절 등 그들은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기고



정 서 우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요즘은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생겨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핸드폰 좀 그만 해”라고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기도 하고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운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살펴보자. 첫째,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도중 유해한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디지털 세상 속,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광고를 끄는 'X' 버튼이 매우 작아서 실수로 클릭하면 원치 않는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내가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남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퍼뜨리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결국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며,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SNS 사용을 줄이라고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해 사이트나 광고를 점検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신고하면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DVS(디지털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를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낯선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자. 아무리 재미 있어 보여도 낯선 메시지는 위험한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나도 상대방처럼 보복하려 한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사이버 폭력에 현실에서의 신체적인 폭력과 같은 만큼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社說

역사 왜곡 도서 비치 사과한 광주시·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 비치에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수조사를 실시해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3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책은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한 정규 교사가 사업비로 구입한 것으로 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또한 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추천사를 써 준 사실도 밝혀냈다.

도교육청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18개 도서관(도교육청 산하 8곳·학교도서관 10곳)에서 26권을 구입했으며, 대출 횟수도 13차례에 이른 때문이다. 아울러 책 발간 당시 도내 교사 4명이 추천서 명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늘봄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했다. 심지어 전두환을 찬양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련 기관을 챙겨달라고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공개 증언까지 나왔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더욱 할 말을 잃었다.

부적격 도서 채택의 정확한 경위를 규명해야 하고, 추천사를 쓴 교사들에 대해서도 위협했던 것인지 촛흔치 살펴봐야 하겠다.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한 인식 아래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차제에 각급 학교의 책 구매와 비치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일선 교사의 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실에 이념 편향적 시각을 심으려는 나쁜 시도였다. 국론 분열을 획책했다. 악질적인 역사 왜곡·편향세력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 엄한 처벌만 있을 뿐이다.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광주시·전남도교육감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국가 섬 통계는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다

국가 차원의 섬 통계가 나왔다. 한국섬진흥원(KID)이 섬의 날(8월8일)을 맞아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유인섬 480개, 무인도서 2천910개 등 3천390개로 나타났다. 역시 전남이 2천18개로 58.5%를 차지했다. 유인섬 277개, 무인도서는 1천741개였다. 이어 경남 555개(유인섬 80개 무인도서 475개), 충남 285개(유인섬 37개, 무인도서 248개) 순이다.

국내 섬 거주 인구는 8만3천475명으로 전체 인구(5천115만9천889명)의 1.59%에 해당된다. 전남지역은 15만5천929명으로 경남(30만3천274명), 인천(21만4천317명) 다음으로 많다. 섬진흥원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와 합동 조사를 거쳐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관리되던 섬 현황 및 데이터의 혼선을 바로잡았다. 이번에 육지와 연결 상태(연륙교), 여객선 운항 여부, 접근성이 취약한 소외도서 등도 포괄적으로 수록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어우러진 소중한 공간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듯 영토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치유 산업이 부각되면서 최고의 블루투어 상품으로 뿔었다.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삼은 까닭이다. 섬의 날은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해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한 날짜로 제정됐다. 올해 제6회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완도해변공원과 인근 섬 일대에서 열렸다. 진흥원은 국제학술대회, 홍보전시관 운영, 섬 풍류학교, 놀이교실 등을 주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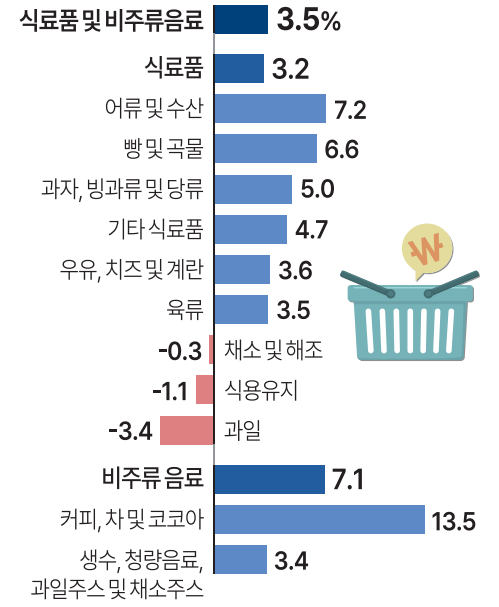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국가균형발전전을 이루는 토대다. 관광자원화를 넘어 전략적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국민 누구든 섬을 더 가깝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도 확대돼야 한다. 보전과 활용 모두 집중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 환경·안전·관광·교통 등 정책을 수립할 기초자료로 의미가 크다. 정부도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거점으로 만드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향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수행에 더 속도를 붙여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먹거리 물가 등락률

2025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립뉴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채감 물가 부담은 더 커 보인다.

11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훌쩍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식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두달 연속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기도 줄음이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식품품 중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에서 고공행진하며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비교적 큰 폭 오름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